

2014-01
정책연구과제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 연구부장

목 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중국의 대외정책

1. 주변외교
2. 신실크로드 정책
3. 신안보관
4. 신형대국관계

III. 중국의 주변국 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정책
2. 섬을 위요한 중국과 일본의 대립
3. 중국,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설정
4. 남중국해 군도(群島)를 둘러싼 영토 분쟁
5.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6. 중앙아시아를 위요한 중국과 러시아간 경쟁
7. 중국·인도 관계
8. 중국·북한 관계

IV. 중국의 전략 목표와 한국에 대한 함의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요 약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은 안정되어 있으나, 중국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세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변화의 시기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정상국가화 노력이 있으며, 미국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북아 국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에서 1991년 소련의 붕괴를 이데올로기(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결 역사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로 규정하였고,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1996년 출간된 자신의 저서 『문명의 충돌: 세계질서의 재편(The Clash of Civilizations: Remaking of World Order)』에서 냉전이후 세계 각지에서의 갈등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 주요 문명 간 문화와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며, 문명 사이의 경쟁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미 국무장관은 2014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 『세계 질서(World Order)』에서 각국의 역사, 문화와 인권 존중의 기반 위에서 글로벌(global), 구조적(structural), 법률적(juridical)인 세계 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상급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 질서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정책,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였는데, 무역과 투자를 통해 세계 질서의 변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금융 질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 등 중국이 제시한 대외 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중국 포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체제를 이완시키고, 주변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 지,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역량을 군사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려고 할지는 향후 동아시아 정치 경제 군사 안보의 향방에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는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보다 큰 다자 안보 조직 창설을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I. 문제의 제기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세력의 전이(轉移)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외교와 실크로드 정책, 신안보관을 제시하고,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대외정책은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 목표와 ‘중국의 꿈’을 제시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 인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小康社會)를 만들고, 중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과 조화롭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두개의 백년’ 목표는 1997년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15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것인데,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두개의 백년’ 목표를 ‘중국의 꿈’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2018년까지 경제력에서 미국을 따라 잡고, 2049년까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합친 경제력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주변외교 개념은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인데, 이웃 나라에 대해 성의를 갖고 대하며, 중국 발전의 혜택을 나누고 포용한다는 운명 공동체 개념이다. 시 주석의 주변외교에는 옛것과 새로운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동반자로 삼으며(목린), 이웃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안린), 부유한 이웃(부린) 등은 기존의 정책이다. 여기에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이라는 새로운 지도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인심을 얻고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일을 펼쳐 주변국이 중국을 더욱 우호적이고 친근하며, 이해하고 지지하게 만들어 중국의 친화력, 감화력,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변 외교의 분야별 정책은 다음과 같다. 경제 분야는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구조의 심화를 강조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동남아시아에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그리고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만들어 역내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주변국들과 경제 일체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2014년 5월 20~21일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¹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신안보관을 제시했는데, 아시아의 협력, 지속 가능한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 신안보관은 아시아 안보 및 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여 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역내 안보협력 강조,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역내 복합적인 안보협력 기제를 만들어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주변외교와 신안보관 및 실크로드 정책과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의 주변국 관계 현황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대외 정책

1. 주변외교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0월 24~25일간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과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성원, 재외공관장, 지방정부, 신장건설병단, 인민해방군, 국유기업 간부 등 외교·안보·경제 관련 정치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하여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변외교는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기본개념에 입각하여 경제적 유대관계를 견고히 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하며, 긴밀한 인문 유대 강화를 통해 주변국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¹ CICA는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고, 한국 등 24개국이 정회원이며, 미국·일본 등 9개국은 옵서버임. 2년에 한 번씩 장관급회의와 정상회의가 번갈아 개최되는데, 2014년~2016년은 중국이 의장국임.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꿈’ 목표 달성을 위해 주변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교역 상대국이며, 동시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중요하다. 주변외교와 관련하여 중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발전하고 번영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영토분쟁 중인 필리핀과 일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아세안 회원국 국가들을 방문하거나 아세안 지도자들의 중국 방문을 초청하였음에도, 필리핀은 예외였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필리핀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다오위다오(釣魚島)가 포함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동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비행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당국과의 교신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아세안 국가 방문 시 경제협력 외교가 중심에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2013.10월 아세안 국가 순방에서 236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고, 리커창 총리 또한 비관세 장벽 철폐와 서비스·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신실크로드 정책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방문 시 각각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해상 실크로드’(一路) 구축을 제의했는데,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은 아시아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여 대중화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신실크로드(一帶一路) 정책은 중국이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을 상호 연계시키려는 대외경제 전략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책, 인프라, 무역, 통화, 사회교류 등 5통(五通)을 실현하기 위한 신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중국·동남아 협력 증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제의하였다.

이후 신실크로드 정책은 2013년 11월 개최된 제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와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제12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비준되어 중국의 국가 주요정책이 되었다.

신실크로드 정책목표는 1) 교통연계망 구축, 2) 무역·투자 활성화, 3) 금융분야 협력강화, 에너지 및 식량 확보, 4) 민간교류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철도항만 건설,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 설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이다. 21개국 참여하에 AIIB 설립을 위한 MOU가 2014년 10월 24일 서명되었는데, 신실크로드 정책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이 BRICS 국가들과 설립에 합의한 신개발은행(NDB)과 함께 새로운 지역 금융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장 지역은 8개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신장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구축 방안을 지속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는 항만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단의 포트수단(Port Sudan)을 잇는 동남아 및 인도양의 에너지 해상 운송 루트 상에 위치한 중국의 군사 및 상업시설 연계망 건설과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 몰디브의 마라오(Marao)섬,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항,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항, 태국의 크라(Kra) 지협, 미얀마 짜옥퓨(Kyaukphyu)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남아시아 지역운송 루트 항구 건설 구상에 대해 미국, 일본, 인도 등은 군사적 목적이 큰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신실크로드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몽(中國夢)’의 대외발전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주변



국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항만·도로·철도·공항 등의 인프라 시설 건설 등에 추가 투자 수요가 생길 수 있으며, 물류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변국과 중국 서부·중부·남부 경제권을 회랑으로 연결시키고 주변국에 저부가가치 산업을 이전시키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실크로드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은 21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대중화 경제권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 신안보관

시진핑 주석은 제4차 CICA 정상회의(2014년 5월)에서 ‘신안보관’을 제시했는데, 공동 안보, 종합 안보, 안보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4차 CICA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삼자를 겨냥한 군사동맹 강화는 지역의 공동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권과 독립, 영토 안정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 등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과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관심사를 존중, 고려해야 한다.”

“한 나라의 안보가 다른 나라의 불안 요인이 되거나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자국의 안보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분쟁과 갈등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공동 안보, 종합 안보, 협력 안보, 지속 가능한 안보를 특징으로 하는 아시아 안보관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아시아 상호협력 및 신뢰 구축회의’(CICA)를 전체 아시아의 안보 대화 협력 무대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CICA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 관련 협의 조직과 조치 이행에 관한 감독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반테러, 경제·무역, 관광, 환경 보호, 인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 능력과 지혜가 있는 아시아인들은 협력 강화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

“아시아는 민족, 종교 간 모순과 테러리즘, 국제 범죄, 환경 안전, 인터넷 안전, 에너지 안전, 중대 자연재해 등으로 도전받고 있는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협력으로 지역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새로운 안보 기구가 필요하다.”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테러주의, 분열주의, 극단주의 등 3대 극단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타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신아시아를 대화와 신뢰 협력 강화 및 평화와 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새로운 안보관을 제시한 것인데, 중국의 신안보관은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신형대국관계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외교 추진과는 별도로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처음 언급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시진핑 주석인데, 미국과 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무역, 투자 등 제반 관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규율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중국 측이 신형대국관계를 제의한 목적은 미·중 관계가 제로섬(zero-sum)적인 전략적 경쟁 관계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다른 시각은 미·중 관계를 ‘완전히 동등한 관계’로 파악하려는 시각인데, 이는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며, 중국의 부상 은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강국 미국과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요 강대국 관계를 조율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은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두 개의 백년’과 ‘중국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미 외교 정책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신형대국관계에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지향점도 없다면서, 제안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미국 측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중국 지도자들이 특히 국내 질서와 국내적 안정 문제에 몰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측은 신형대국관계 개념이 과거 소련이 미국에 제의한 평화공존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장기의 전략적 사고를 하는데 훌륭한 역량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중국 지도부는 환경 문제 등 당면 현안으로 인해 대전략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인사들은 미·중 관계가 공통의 규범과 상호 존중의 기반 하에 발전되어야 하며,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 규범을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 인사들은 신형대국관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외교, 민간 교류에 중점을 둔 포괄적 의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신형대국관계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결해야 할 안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미국과 중국은 센카쿠 문제를 포함한 영토주권 분쟁과 관련하여, ‘현상 변경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평화

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국은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중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해서, 상호 전략적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공통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의와 국제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신형 대국관계가 열망(熱望)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핵심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간 공통의 안보 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전략적 경쟁을 피해야 하며, 위기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현실적인 반면, 중국의 접근 방식은 개념적이다. 강력한 주변의 적이 미국을 위협한 사례가 없는 반면, 중국은 항상 국경 지역에 강력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압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점진적 변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실제적이고 이행 가능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중국은 일반 원칙을 세우고 중국이 주도하는 지점을 분석한다. 중국인들의 사고는 부분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나 점차 전통적인 중국 고유의 방식을 포용하는 경향이 있다.

Ⅲ. 중국의 주변국 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정책

미국 정부는 2012년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발표했는데, 재균형 정책은 첫째, 군사·안보 정책이며, 둘째, 무역·통상 정책이다.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은 2020년까지 11개 함대그룹 중 6개 함대그룹을 포함한 미 해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이것이 군사·안보 정책이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추진이 무역·통상 정책이다.

미 국방부가 아·태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발표한 공해전 독트린(AirSea Battle doctrine)은 미국이 소련의 서유럽 침공에 대응하는 군사 전략으로 1980년대에 발표한 공육전 독트린(AirLand Battle doctrine)과 유사하다. 미국의 공해전 독트린은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 국방부의 전쟁 대비 계획이다.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지도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지만, 미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명나라 이래로 중국 본토에서 원양 지역으로 해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중국 해군은 대륙의 연안 방어를 목표로 했는데, 이는 전 세계를 작전 지역으로 해 온 미국 해군과 다른 특징이다.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칭(劉華清)은 1982년 덩소평(鄧小平)의 지시로 인민해방군 해군 근대화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계획에는 제1열도선(the first island chain; 북쪽으로 알류산 열도와 남쪽으로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을 중국의 해상 방어선으로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해군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원정 파견은 최초의 연안 방어 목표의 예외 사례이다. 최근 중국 해군이 방어 구역을 확대하고,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는데, 연안 방어라는 중국 해군의 기본 목표가 변경된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무역·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TPP에는 한국·호주·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싱가포르·베트남·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2/5, 전 세계 무역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TPP는 29개 조항(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기준, 환경안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에 참여하는 각국은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쌀·쇠고기·돼지고기·설탕·유제품에 대해, 호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에 대해 예외(carve-out)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수 국가들은 협정상의 지재권 관련 조항에 우려하고 있다.

TPP 협정에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별도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TPP보다는 낮은 수준(lower quality)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보다 큰 범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이다.

TPP 협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TPP 협정에 통화 조작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미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일본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하게 엔화 평가 절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이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섬을 위요한 중국과 일본의 대립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은 일본,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과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한가운데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민간인으로부터 센카쿠 섬을 매입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격분하였고, 중국인들은 중국 내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인들의 주 관심이 돈을 모으는 것이므로, 전쟁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빈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해외에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영토 확장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섬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양 국민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과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가 점증하는 것도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중국 내 여론조사에서 중국인 50% 이상은 향후 수년 내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나라들은 만약 중국에 양보하면, 중국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굴복하게 되면, 이들 국가는 중국에 이겼으며, 중국에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섬을 둘러싼 갈등 문제의 본질은 향후 한반도나 대만 해협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대처 능력이 있느냐이다. 섬을 둘러싼 작은 분쟁이 큰 충돌로 확대될 경우, 미국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시 군사력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시아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정직하게 기술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신뢰 회복과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 해소와 분쟁 완화를 위해 두 가지 협력 강화 방안과 한 가지 억지(deterrence)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작은 분쟁이 큰 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수역 해상에서 선박 충돌 시 선박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모택동 주석이 미·중 관계 정상화 시기에 대만 문제 해결을 미루어 둔 것처럼, 분쟁 당사국들은 주권이 걸린 영토분쟁 문제를 장래 문제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센카쿠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agree to disagree)’는 방식 등이다.

셋째, 센카쿠 문제에서 미국은 섬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지만, 외부 공격으로부터 섬을 보호할 필요성 문제에서는 비교적 명확

히 일본 입장을 지지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굴기(掘起)하는 중국이 국제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부상(浮上)이 주변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 중국이 당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불신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강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시진핑 주석은 어떠한 영토 주권의 문제도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하며,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3. 중국,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설정

중국은 동중국해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2013년 11월 23일 기습 발표했는데, 중국이 설정한 구역에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와 한국의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1월 26일 괄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중국이 사전 통보 없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였다. 2013년 11월 28일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도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하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미국 제5대 대통령이 1823.12월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표명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과 유사한데, 중국 앞바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므로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조치는 1996년 강택민(江澤民) 주석이 미사일 실험을 위해 대만해협 인근 지역에 배타적 수역을 기습 선포하여 미 항공모함 2척이 대만해협으로 진입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적 위기가 고조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1945년 전후 체제에 변경을 가하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1945년 체제를 존중하고 자유항행과 자유운항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는데, 중국의 방공식



별구역 설정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발표의 방식과 구역의 범위, 영토 분쟁 지역이 포함된 점, 관련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문제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강대국인 때는 없었는데, 1850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강대국이었고, 1850년 이후에는 일본이 강대국이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둘러싼 기선 제압 의도로 보인다. 센카쿠 열도가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라예보의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데, 중국과 일본 모두 자제해야 하며,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 및 발표가 단기적·전술적으로는 손실이나, 장기적·전략적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조치로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다.

중국이 노리는 장기적, 전략적 이익은 향후 예상되는 센카쿠 열도를 위요한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었다는 새로운 위상을 주변국과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군용기의 정찰·훈련 비행을 계속하여 군사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면서도, 미국 민간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사전에 알려주도록 권고하여 중국의 체면도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발표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해군력 강화, 미사일 방어 계획을 둘러싼 미·일 간 협력 강화에 대응한 마오쩌둥 방식의 기습선제 전략이며, 손자(孫子)의 병법 전략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미국은 1945년 체제에 변화를 도모하려는 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도, 변화된 국제 시스템에서 신장된 중국의 역할과 입지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남중국해 군도(群島)를 둘러싼 영토 분쟁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중국해 상에서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고,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과 1951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는 것이며, 필리핀은 무주지 선점과 필리핀 경제수역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다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반면, 중국은 분쟁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있어,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샤(南沙; Spratly) 군도는 11개 섬과 6개 사주, 105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이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관계는 1991년에 정상화되었는데, 2014년 5월 남중국해 소재 난샤 군도에서 중국이 '981호 석유 플랫폼' 시추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베트남이 강력 반발하여,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생했으며, 중국인 사망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남중국해 시샤(西沙; Paracels) 군도는 15개 섬과 5개 산호 환초, 5개 사주, 4개 모래톱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1974년 중국의 시샤 군도 무력 점령을 계기로 중국과 베트남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4.5.2 중국은 시샤 군도 인근 해역 석유 시추 공사에 돌입, 베트남이 이에 반발하여 초계정을 출동시켰으나 중국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국이 2012년에 무력으로 점령한 중샤(中沙; Scarborough Shoal) 군도는 여러 개의 바위와 사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데, 중국은 양자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가운데, 필리핀은 다자적 접근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2013.1.22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른 중재재판(UNCLOS 제7부속서)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과의 대립 심화는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주변 외교와 신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5.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는데, 중·러간 밀월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동아시아 정세를 관찰하는 데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긴밀해지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양국 간 상호 불신과 경제력 차이, 전략적·문화적·역사적 상이함을 이유로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use each other)는 주장도 있다.

양국 관계 긴밀화에는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의 의기투합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서방이 거부한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였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국내 반체제인사들을 탄압하고, 세계 경제를 잘못 관리해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한 미국에 대해 ‘간섭하는 제국주의 강대국’이라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홍콩 사태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였는데, 러시아 국영 TV는 홍콩 민주화 데모를 미국이 사주하여 중국에 타격을 주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보도하였는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의 데모대를 모스크바로부터 러시아 망방(우크라이나)을 분리시키려는 미국의 음모적 노력으로 묘사한 것과 같다. 중국 언론은 푸틴 대통령을 서방의 간섭에 대항하는 강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수록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더욱 긴밀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러시아 측 인사들은 중·러간 협력 강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화두인데, 양국 간

문화, 역사적 차이와 냉전 시절 공산 세계 지도력을 두고 경쟁한 경험 등으로 인해 양국 간 동맹관계 수립은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 일부 인사들은 러시아가 부상하는 중국의 주니어(junior)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우려가 있다. 현재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 데 비해, 러시아는 중국의 10대 무역 상대국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인 데 비해, 인구는 1억3천만 명 정도로 중국의 1/10 수준이다. 러시아 영토는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유럽 부분과 아시아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대한 러시아 우랄 이동 아시아 지역 인구는 3,500만 명에 불과하다.

중국 동북 3성 지역(내몽고 포함) 인구가 1억 5천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인구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침투에 대해 러시아의 우려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반테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2013년 SCO 정상회의에서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 구축 계획에도 합의한 바 있다. 실크로드 경제 벨트 구축 계획에는 국가 간 정책 대화, 도로 건설, 무역 거래, 통화 유통,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구(舊)소련 국가들과의 국경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러시아에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SCO 창설을 조직하고 주도했지만, 현재 SCO는 중국의 중앙아 진출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측면이 있다.

2013.7.13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SCO가 정치·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SCO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유럽연합(EU)가입을 통해 유럽화(Europeanization)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유럽화는 러시아가 EU에 가입하여 사회, 경



제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유럽의 일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이 되어 정치·군사·안보적으로 미국과 연계된 유럽의 일원이 되는 것이 러시아는 물론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중앙아시아를 위요한 중국과 러시아 간 경쟁

러시아는 2010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3국 간 상품·서비스·노동·자본 시장이 개방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국 관세동맹에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시켜 관세동맹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유라시아 관세동맹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은 자국 내에 일자리가 없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타지키스탄 근로자의 약 절반 정도가 해외(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국내총소득(GDP)의 47%가 해외 근로(타지키스탄)근로자들의 송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심각한 근로 일자리 의존 상황을 고려할 때 타지키스탄이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동맹 가입을 거절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내 5백만 명의 외국 근로자 가운데 3백만 명이 불법 체류자인데, 러시아 정부는 3백만 불법 외국 노동자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근로 인구의 약 20% 정도가 러시아 등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구소련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타지키스탄과 다른 상황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재수출하는 중개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데,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교역 규모의 50%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이다(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 간 교역량은 키르기스스탄 전체 교역 규모의 17% 수준).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기업인들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관세동맹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 국가의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국경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로워질 경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입국하여 러시아 내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상품 수출, 에너지 수입, 건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 지대인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도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노동 시장 분야에서 그러하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 근로자들을 데려와 쓰고 있어 일자리가 없어 외국에 나가 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근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2년 2월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그리고 2012년 5월 ‘대외정책 실행조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일본·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신동방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동방정책은 중국·일본·한국·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를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러시아는 연방정부 내 극동개발부를 설치했으며, 2012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여 러시아의 미래 프로젝트로 에너지 안보와 함께 식량 안보를 천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 추진을 선언한 배경에는 첫째, 중국의 부상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둘째, 러시아가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긴요하고, 셋째, 석유·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며, 넷째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없이는 러시아의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신동방정책 추진을 선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3국 간 상품·서비스·노동·자본시장이 개방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3국 관세동맹에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시켜 2015년까지 관세동맹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 국가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국경 통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로워질 경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의 입국으로 인해 러시아 내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할 수 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대상은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 구소련 공화국들인데, 이 지역에서 중국은 신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 실크로드는 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역내 교통망 개선과 투자·무역 협력 강화, 위안화 결제 확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자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축 정책 참여를 약속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정책과 중국이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정책은 상호 대상 지역과 정책 목표가 중첩되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값싼 상품의 수출, 에너지 수입, 건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만약 러시아에 지정학적 적(敵)이 있다면, 이는 중국일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극동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간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티아구노프(Tiagunov) 러시아 연방 하원 의원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합법적 침투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이 20대 중국 남성과 40대 러시아 여성을 결혼시켜 러시아 국적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한 후 중국인 일가친척 수백 명을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의 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7. 중국·인도 관계

중국이 추진 중인 해양 실크로드 정책에 대응하여 인도는 ‘마우삼 프로젝트’(Project Mausam)를 준비 중인데, 마우삼 프로젝트는 인도양 지역의 고대 해상교역로와 문화적 연계성을 되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국가적 이니셔티브로 동아프리카-아라비아반도-인도-스리랑카 지역의 중층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우삼 프로젝트는 인도양 지역 내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응하는 인도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경제적·문화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14년 7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6차 BRICS 정상회의에서 BRICS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² 설립에 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NDB 초대 총재에는 인도가 선정하는 인사가 임명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유엔안보리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안보리의 일방적 군사개입 및 경제제재에 반대하는

² BRICS 신개발은행(NDB)은 2016년 출범 예정으로, 500억 불의 초기 자금과 1,000억 불의 위기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 업무로는 BRICS 내 인프라 산업 및 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과 보조를 취하면서도 사안별로 중국과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 정부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했는데, SAARC 국가들은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SAARC 개발은행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BRICS가 주도하는 신개발은행의 하위 구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출자금 규모와 인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인도가 가입을 결정하게 되면 42%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 이어 19% 정도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AIIB 가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인도가 AIIB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남아시아 대다수 국가가 AIIB를 지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힌두 민족주의자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총리는 같은 민족주의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2007년과 2012년에도 모디는 구자라트 선임장관(Chief Minister of Gujarat)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신조를 만났는데, 나렌드라 모디는 아베 총리가 ‘팔로우(follow)’하는 3명의 트위터(Twitter)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한다.

2002년 구자라트 주에서 힌두 이슬람교도 폭동이 발생하여 서방 정치인들도 모디 선임장관을 만나는 것을 피하던 시절이었다. 모디 총리는 2014.8.30 일본을 방문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자동차·전자 공장들이 인도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속열차, 원자력 건설, 전투기 합작생산 등 분야에서 일본·인도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인도·호주 관계도 긴밀화되고 있는데, 호주 시드니 소재 ‘로위 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의 메드칼프(Rory Medcalf)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인도·호주 관계를 “위험 회피와 균형의 발레(a ballet of hedging

and balancing)”로 지칭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11월 호주 브리즈번 G20 개최 계기에 호주를 방문했으며, 인도·호주간 해군 합동 군사훈련이 201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9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인도 방문 시 모디 총리는 오랜 현안인 중국·인도 간 히말라야 국경 분쟁을 제기하였다. 2014년 5월 모디 인도 총리는 티베트 망명정부 선출 지도자인 롽상 상가이(Lobsang Sangay)를 취임식에 초청하였다. 모디 총리는 자신의 외교장관인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를 2014년 8월 말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에 파견하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인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인도 전함이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중국에 가까운 베트남 북부 해양지역인 하이퐁(Hai Phong)에서 인도 해군은 베트남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인도·베트남 간 해군 협력은 잠수함 요원 훈련, 군함 수선, 순시함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지역 인근 베트남 수역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Oil and Natural Gas Corp)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시추권을 연장해 주었다.

인도는 오랫동안 동방정책(Look East)을 주창해 왔다. 베트남은 인도를 “언제나 한결같은 친구(all-weather friend)”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중국을 화나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4. 9월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을 방문하여 전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 시절 어려웠던 미국·인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인도 정상회담에서는 인도양에서의 해군 합동 훈련 문제도 논의하였다.

8. 중국·북한 관계

2013년은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는데, 북한은 2013.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013.11월에는 장성택을 처형하였다. 이



두 사건이 북·중 관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은 중국 지도부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대표적인 친(親)중국 인사인 장성택이 처형된 것은 상당기간 중국과 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대안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간 긴장 상황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칭궐(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2014년 2월 25일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 동북지역의 환경,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은 핵확산 위험을 높여 중국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무리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핵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 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여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자칭궐 원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하며, 북한이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V. 중국의 전략 목표와 한국에 대한 함의

중국은 다음의 여섯 가지 전략 목표를 고려하면서 주변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잠재적·지정학적 중국 포위에 내재된 위협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 조약을 약화시키고,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해군력으로 제압하고 있는 미국, 인도 등이 중국의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의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을 완화시키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거의 봉쇄된 중국의 육로를 통한 유럽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커뮤니티에서의 중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인도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파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중앙아시아와 몽골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1국 2체제' 방식을 통한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섯째,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원, 농산품, 에너지를 확보하고, 중국산 제품의 범세계적 판매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주변외교와 신실크로드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첫째, 중국 포위를 완화시키고 미국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둘째,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주변국들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셋째, 중국 상품판매 시장과 중국 자본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원자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



로써 미·중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었는데, 경제적 측면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1개국 참여하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2014년 10월 24일 출범시켜 AIIB를 창설하고, BRICS를 통해 개발은행 창설을 모색하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이 세계 금융(IMF, World Bank, GATT)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돌파구로,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금융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무모하게 확대하여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합의 도달에 방해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기업)이 밀려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 있는데,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주요국들과 안정적인 지정학적 다원주의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국 및 이란과 협력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견제하고, ‘소련 제국’ 부활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할 경우,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중국·이란 간 반미 삼각동맹 협력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는데, 반서방·반미 삼각동맹 협력은 중국이 불만을 품고 좌절하고 적대적이 될 경우 가능하게 된다.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상대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전략대화를 지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질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대중화경제권을 구축하고 새로운 역내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4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CICA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시대적 사고로 비판하면서 미국이 빠진 아시아만의 안보구조 구축을 위한 CICA(a platform on which to build a distinctly Asian security architecture)를 주장하면서, CICA는 이집트, 터키, 한국, 브루나이까지 아시아 동·서부를 포괄하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는 CICA가 역내 안보의 핵심 기둥이 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경제력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중국은 현재의 세계 질서가 중국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전통적 가치(주권, 국내문제 불간섭, 기존 국경선 유지)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정치·경제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 노력을 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 행보(a delicate balancing act)를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본토에서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1천1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 중국 진출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 약 2백만 명 고용)

2014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대외정책 관련 중요 연설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중국은 강대국이다. 따라서 상응한 국제적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 질서와 중국의 주변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외부세계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국제질서 변화의 민감한 과정은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상기 연설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주장한 도광양회(칼집의 빛을 숨기고 실력을 배양하라)에서의 빛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